

# 또 '트럼프 리스크'가 온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 올바르다와 옳다

'올바르다'는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우리말이다. '올바르다'를 '올바르다'로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올바르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옳고 바르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변화형은 '올바라·올바리니'와 같이 '르'불규칙을 따른다.

'옳다'는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남이 없다'는 말 또는 '있었던 일을 갑자기 생각해 내거나 어떤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과거에 집착하여 무조건 일본을 적대하는 것은 옳바른 태도가 아니다"와 같이 쓰면 적당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올바르다'·'올바라'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규범에 어긋리고,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 다른 의미로는 '적당하다'·'맞다'·'타당하다'·'제대로 되어 있다'·'옳다' 등을 나타낸다.

그런데 '옳다'에는 'ㅎ'이 들어가는데 '올고 바르다'의 합성어인 '올바르다'에는 'ㅎ'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참고로 북한사전에는 '올바르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북한의 문화어와 우리의 표준어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어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올바르다'는 '올(살과 가시·絲條)이 바르다'에서 유래한 단어이므로 '올(살오라기)'을 어근으로 삼은 것이다. '옳다'는 발음이 [올타]이므로 'ㅎ'이 들어가야 한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문화회 회장



스카이 View

김학형  
국제문화부 국제팀장

11월5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확정됐다. 여전히 세계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초강대국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적잖이 달라질 것임은 불문가지다. 특히 유럽·중동의 두 전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미국이 해결하기 어려워도 미국의 방향타가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시점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달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난 당신네(나토)를 보호하지 않고 그들(러시아)이 내키는 대로 하라고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한 2006년 합의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잇따른 전쟁으로 각국이 국방비를 크게 올렸음에도 지난해 나토 31개국(스웨덴 제외) 중 10개국만 'GDP 2%' 조건을 충족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올해 18개국 달성을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미 유럽대신 주자의 지적 이후 모든 회원국의 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계 최대 군사동맹을 향해 적국의 공격을 방관 또는 격려하겠다고 겁박을 서슴지 않는 지도자가 한미동맹은 과연 어떻게 대할까. 정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나라에 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근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확정됐다. 누가 당선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행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치 아픈 일일 수 있다. 지난 재임 시절 그는 제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우리 정부의 분담금을 기존 약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500%(5배) 인상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다. 결국 1년이 넘도록 협상이 공전을 거듭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2021년 3월 13.9% 인상(2022-2025년 국방비 인상을 반영)에 합의했다. 그가 재집권하면 12차 SMA에서 또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리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최근 한-미가 평소보다 빠르게 같은 날(5일) 협상단 대표를 임명한 것은 협상을 서둘러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9차 SMA 협상엔 약 6개월(2013년 7월-2014년 1월)이 걸렸다. 그가 북한에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것으로 의심받

는 점도 문제다. 보수 성향의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과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쏟지 않고 더 큰 과제,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북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가 임기 내 치적을 쌓기 위해 추가 개발을 제외한 북핵을 용인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취지의 전망과 분석도 적지 않다. 물론 그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으나 여러 정황이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만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된 저서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들(국내 미발간)'에서 "2020년 대선에 조작되지 않았다(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그(김정은)는 북한 국무위원장)와 핵무기 관련 합

의를 했을 것"이라고 순회했다. 어떤 합의일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가 지금껏 미국이 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되며 비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아닌 '핵 동결'로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안보방위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 개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긴 하지만 핵심은 미국의 차기 정부를 향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워싱턴 선언'을 끌어냈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막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한미동맹의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고 치켜세웠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이 독자 개발을 언급했고 이를 원하는 국민이 과반(2022년 시카고국제문제학회 71%, 2023년 1월 한국일보 67%)인데도 한국이 미국의 힘과 핵우산에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장엄한 원호를 알마나 먼 미래까지 확장하느냐가 미국의 과제"라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대비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다뤘다. 과거 발안·행보만으로 미래 정책을 가능하게 건 무리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행히 민주주의는 어떤 지도자든 혼자서 명령하고 결정하게 놔두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러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가 당선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행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hkim@skyedaily.com

# 정책금융상품에서 '청년' 기준은 공정한가



데일리 Talk

윤승준  
경제부 기자

"지이잉" 며칠 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깬다. 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청년도약계좌 관련 문자가 온 것이었다. 읽고 나서 순간 멧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최종통지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중순 2년간의 청년희망적금 적립을 끝내고 만기예 전부를 청년도약계좌로 일괄 납부하려고 심사를 받았던 건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중위소득 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심사할 때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을 보

는데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나이와 개인소득만 심사하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랐다. 정부에서 정한 3인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은 9060만5542원이다. 가족 3명의 연봉을 합쳐 그 금액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정책금융상품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주변의 지인·친구를 보면서다. 직장인인 한 친구는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고 날씬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음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었다. 부모와 가구원이 분리돼 1인 가구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200만7939원이다. 다른 친구도 매달 부모로부터 월세와 용돈을 받고 있음에도 청년도약계좌에 어렵지 않게 가입했다. 1인 가구에 속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서다.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자율 연 6%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담긴 적금 상품인데 어느 누가 포기하겠는가. 다만 중장기 자산 형성이 절실한 청년을 제대로 슈아냈는지는 의문이다. 소득뿐 아니라 나이 요건도 공평하지 않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73%인 점을 고려하면 2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대학생이다. 과연 대학생이 혼자 힘으로 매달 7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생활비를 혼자 충당하기도 벅하다.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학생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시끄럽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이들에게 공정하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으로 선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누군가는 월급이 많다고 가족 부양 등

에 상당 부분을 써야 해 손에 쥐어지는 게 적을 수 있다. 다른 누군가는 월급이 적어도 자신에게만 온전히 쓸 수 있어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소득 기준을 넘는 '흙수저' 청년은 지원받지 못하고 월급이 적은 '금수저'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견 정책 실패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소득만큼 자산 규모도 따져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에 '내 집 마련'하기는 어렵고 결혼·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모든 걸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 다만 많은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을 꼼꼼히 개발한다면 혼인율·출생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소득·나이 두 개로 특 자르지 말고 여러 요건을 고려하되 기준 문턱을 낮췄으면 한다.

sjyoon@skyedaily.com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 필 황중택  
인쇄인 임재청 편집국장 고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농협안심한우  
농협안심한돈  
농협안심계란  
농협안심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사원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